

문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여야정협의체 분기 개최”

11월 첫 회의...소상공인·규제혁신 민생법안 처리 3차 남북정상회담 협력 합의...남북 국회 교류 추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및 5당 원내대변인이 참석했으며, 2시간 12분에 걸쳐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은 작년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민주당 박경미·한국당 신보라·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오찬 후 합동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이룬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크게 세 가지 합의를 했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우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력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했다.

첫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기로 했으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내세운 협치 관련 핵심 공약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해졌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는 문 대통령이 재차 협의체 가동을 제안하고, 야당 원내대표들이 국정논의를 위한 정례모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례화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아울러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과 관련,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을 8월 임시국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연합뉴스

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혁신 법안’ 관련해서는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는 대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최소화와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또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월 중순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가 협력하고 지원한다는 뜻을 같이했다.

나아가 ‘남북 국회와 정당간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

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문 대통령은 회동 인사말에서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방문시기와 방문단 규모·일정을 복측과 협의해야 하지만 우

리 정부 기본입장은 국회도 함께 남북해 남북간 국회 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평양회담 이전에 해주신다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한 부분은 이날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연합뉴스

정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올해 운영비 약 35억 지원

개성공단 내에 들어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올해 운영비 약 35억원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된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2018년 운영경비 34억7,300만원을 지원키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시설유지·관리비, 남북연락사업 추진비 등으로 구성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연락사업은 산림협력과 신경계구상, 철도·도로 조사 등 남북공동연구 조사사업을 위한 남북관계자간 연락·협의를 지원하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교추협은 이달 6일부터 14일까지 서면심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가 남북간 상시적 대화와 협력, 남북관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며 “판문점 선언을 분야별로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7년 지지부진, 영산강 4지구 총력지원”

평화당, 합평서 최고위 회의 폭염·가뭄 피해 지역 방문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16일 합평을 찾아 영산강 4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과 폭염·가뭄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합평군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산강 4지구 사업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는 수조 원을 투입했는데 영산강 사업에는 17년 동안 고작 4,000억원 밖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정부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영산강 4지구 사업은 영산강 수계에 양수장 10곳, 조절지 7곳, 용수로 487km, 배수장 13곳을 갖추는 사업으로 총공사비 8,573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작금 17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준공 지연으로 용수 공급 등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운데)가 16일 오전 합평군 합평읍을 논을 찾아 폭염과 가뭄 피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 대표는 “17년 동안 충분히 뚝 들었으면 됐다”며 “앞으로 1~2년 안에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수 있도록 민주평화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장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자연재해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처리해 현재 홍수·태풍·가뭄·우박으로 한정된 자연재해 보상 체계에 폭염도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산 기자

최경환 의원은 “합평·영광·무안군의 클러스터 사업이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국토부로부터 전해 들었다”며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자치만 기본 소식이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합평군 가뭄·폭염 피해 지역을 방문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연합뉴스

정기 브리핑

“선거제도 개혁 추진 골든타임”

장병완 “올해 내 선거법 개정이 협치의 출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는 16일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올해 안에 선거법 개정 협의를 이뤄내자고 다른 4당 원내대표들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 인사말에서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야 4당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20대 총선의 민의는 다량제였고, 이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협치



의 출발은 선거제도 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평화당의 정체성”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판문점선언이 비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소통의 자리가 정례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 기자

민주, 당권후보 ‘공개지지 금지’ 논란

일부 지역위원장들 금지공문 발송 불구 지원 나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 선언 금지를 위해 내부단속에서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최근 특정후보를 공개 지지한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경고조치가 있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다 추미에 대표조차 특정후보 지지는 관에 휩싸여 당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앞으로 특정후보 공개지지 표명 금지 관련 규정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민주당 당규에는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내용이 확인됐을 때는 주의·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 과 시·도위원장, 지역위원장의 중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위원장 일부는 특정후보를 적극 지원하면서 사실상 공개적 지지나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추미에 의원은 당대표인데도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나. 겉으로는 다 공정 중립이면서 당대표까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당규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고무줄’이다”면서 “광주와 전남지역 일부 지역위원장 역시 특정후보를 지원하고 있는데, 당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근산·황애란 기자

민주 당권주자들, 민생·평화 키워드로 정책행보

송 “민생 당대표”·이 “개성공단 정상화”

김진표, 대의원·당원들 만나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은 16일 민생경제와 한반도 평화를 키워드로 한 정책 행보에 주력했다.

송영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개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민생’이라는 4번째 축을 덧붙이는 ‘민생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또한 국가 을지로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당 을지로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매달 한차례 지도부가 민생현장을 찾아가 최고위원회의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6월 당내에

설치된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의 이름이 길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을을 지키려는 노력’ 위원회를 줄여 만든 이름이다. 사회 곳곳의 갑질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당내 특별기구로, 주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았다.

김진표 후보가 처음부터 ‘유능한 경제 당대표’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고, 이해찬 후보가 ‘민생경제연석회의’를 구성해 노사정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공약한 만큼 송 후보도 관련 정책비전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송 후보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집값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도록 하겠다는 제 공약을 이해찬 후보가 어렵다고 했다”며 “세대 차이도 상상력의 빈곤”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이해찬 후보의 ‘1강’으로 나타난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모 집단을 어떻게 하느냐, 가중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트렌드가 확실하 저의 상승세라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연합뉴스

이해찬 후보는 한반도 평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방문해 ‘민주주의와 평

화는 하나입니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회견문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미래를 보여준 개성공단의 폐쇄는 명분도 책임도 없는 결정이었다”면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공약했다.

김진표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지역을 찾아가 대의원·당원들과 만나는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연합뉴스